

번역서에 대한 잡음 끊이지 않는다

오역 논란 일으킨 출판사들 재출간 서둘러



번역서의 질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외국소설コーナ.

번역의 수준과 정오(正誤)는 출판계와 학계에서 늘 논의되고 토론해야 마땅하다. ‘이론 수입’으로 학문의 근대화를 꾀해온 우리의 경우 이는 필수적인 지식유통의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출판역사를 돌아보면 번역에 대한 평가는 ‘뒷전’인 감이 없지 않다. 번역 문제가 공론의 도마에 올라온 적이 별로 없고, 어쩌다 불거져 나오더라도 며칠 시끌벅적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번역 논란된 책들, 개정판 작업 들어가

최근 이후가 지난해 7월 출간한 노엄 촘스키의 『죽명의 트라이앵글(전2권)』(유달승)을 일시 품절조치하고 개정판 작업에 들어갔다. 책을 읽은 독자들이 출판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번역이 좋지 않아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니 환불과 시정을 요구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에 대해 이후의 이일규 대표는 “역자와 편집자 모두 독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시 한번 작업하겠다”며 게시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편집을 담당한 정철수씨는 “기존의 촘스키 저

서가 지나친 의역으로 원저의 의미를 훼손한 측면이 있어 직역 위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꺼끄러웠던 것 같다”고 말하며 역자를 찾는 데 시간을 너무 허비해 실제 번역에는 1년 남짓밖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정씨는 “에이전시와 계약한 후 3년 이내에 책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소규모 출판사로서 부담이 돼 불가피하

게 출간했고, 애초에 개정판에서 오류를 수정할 생각이었다”며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지난해 연말에 출간된 『독서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었나?』(에너 퀸들린, 임옥희, 에코리브르)도 읽기 꺼끄러운 번역 문장 때문에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개정판을 준비중이다. 에코리브르 박재환 대표는 “번역원고 편집작업을 외주로 맡긴 것이 화근”이라며 “책을 내기 직전 문장 교열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일부 고치긴 했지만, 그대로 책을 낸 과실은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문을 꼼꼼히 교정하는 중이다.

번역에 대한 비판에 귀 기울여야

번역이나 번역서 편집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그것 자체로는 ‘교정’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일부 출판사들의 경우 독자들의 항의나 공개적인 서평에서 지적된 사항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예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축학 분야의 고전이며 지난 1990년 번역

출간돼 현재 10쇄를 거듭하고 있는 《비투루 비우스의 건축십서》(M. H. 모르간, 오덕상, 기문당)가 대표적이다. 미술사학자 노성두씨는 이 책이 “라틴어 원전을 옮긴 독어·영어 번역본을 재번역한 일어본을 저본으로 삼아 옮긴 책”이라며 “한 페이지당 수십 군데 이상 원저와 다른 부분이 발견돼 읽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한다.

『출판저널』 제310호 ‘서평’에서는 국문학자 정선태씨가 『일본의 문학개념』(스즈키 사다미, 김채수, 보고사)의 번역을 문제삼은 바 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 축자번역”과 “여러 사람이 제각각 읽고 옮긴 것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기문당 출판사의 경우 책을 담당했던 편집자가 퇴사해서 번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일본의 문학개념』을 편집한 보고사의 담당자는 “서평을 읽기는 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서평에 대한 출판사의 입장이나 번역에 대한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답을 피했다.

한국 번역문화의 천박함을 줄곧 지적해온 영남대 법학과 박홍규 교수는 이런 사태에 대해 “번역자의 지식범위가 좁아 원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촘스키나 에드워드 사이드처럼 다학제적인 사상과 언어를 구사하는 사상가들의 저서일 때 “실력이 뛰어난 대학교수가 직접 해도 모자랄 판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해서 집단으로 옮기고 교수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거는 파렴치한 일도 별 죄의식 없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게 우리 번역출판의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또한 “올바른 번역과 번역자의 윤리를 따지기 전에 번역을 학문적 성과로 인정하고 국가나 대학이 나서 ‘번역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번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기자